

특집

김대중 평화사상의 형성과 정치적 실천*

김귀옥 (한성대)

국문요약

20년 전 김대중 전 대통령은 노벨평화상을 수상했다. 노벨평화상을 수상했던 공적은 한반도 분단 이후 처음으로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켰고, 전쟁 없는 한반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기 때문인 것은 잘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일부 사람들은 김대중의 과격성이나 위험성에 대해 문제제기를 해왔다. 과연 김대중은 평화주의적 면모가 있는가, 또한 평화적 실천을 했는가를 규명해 보고자 한다.

이 글에서는 우선 김대중의 평화주의 사상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를 살펴볼 것이다. 다음으로 김대중의 정치적 트레이드마크이다시피 했던 평화통일론의 방점이 통일론에서 평화론으로 옮겨가게 된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다음으로 김대중의 정치인생과 함께 했던 호남에 대한 지역차별주의 문제를 살펴보면서 차별이라는 폭력을 평화로 극복하는 모습을 살펴볼 것이다. 이제 마지막으로 사회구조적 폭력으로서의 계급적 차별과 성차별 문제에 대한 관심과 지향과 함께 평화운동을 위한 주체로서의 시민사회 형성에서 김대중

* 이 논문은 2020년 8월 17일 연세대학교 김대중도서관과 김대중컨벤션센터가 주관했고, 광주광역시가 주관한, 2020 김대중 민주인권평화포럼 학술행사, 『보편과 세계의 눈으로 본 5·18과 김대중: 민주·인권·평화·화해』에서 발표된 원고를 바탕으로 재검정되었음을 밝힌다. 특히 비평과 건설적 제안을 해주신 익명의 세 분 심사자들에게 감사를 드린다. 그리고 이 글을 처음 제안해 준 박명림 선생님에게도 감사를 드리고, 교정에 도움을 준 구동현 한성대 학생과 전여울 졸업생에게 감사의 인사를 보낸다.

의 역할을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주제어: 김대중, 평화주의, 한반도 분단, 평화통일론, 지역차별주의, 사회구조적 폭력, 비
폭력저항운동, 민주주의

I. 머리말 : 평화주의자 김대중의 재발견

20년전 12월 10일, 김대중 전 대통령(이하 김대중으로 칭함)은 한국인 최초의 노벨평화상을 수상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 바 있다. 그러나 2000년 10월, 당시 제1야당인 한나라당 측은 노벨평화상 로비설을 흘리기 시작하여, 모함과 횡방하려는 듯한 부끄러운 일이 있었고, 급기야 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은 김대중 노벨평화상 취소 소동¹⁾까지 벌이기도 했다. 또한 동아일보의 한 주필은 “너무나 투쟁적이고 갈등 지향적이어서 노벨평화상 정신과는 거리가 먼 인물이 아닌지 의심을 불러 일으킨다”²⁾는 칼럼을 작성하여 반김대중 정서를 부추겼다.

김대중 노벨평화상 수상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전쟁 없는 한반도 평화의 길을 연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이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노벨평화상과 김대중의 ‘평화’ 이미지와 관련지어 보면, ‘김대중’에게는 긍정적 이미지 또는 부정적 이미지가 공존하고 있는 듯하다. 1971년 대통령 후보 당시부터 김대중과 관련된 대표적인 이미지나 선입견, 즉

1) 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당시 원장 원세훈)이 김대중 전 대통령의 노벨평화상 취소 공작을 벌이면서 보수단체 간부에게 수상 취소 청원서를 보낼 노벨위원회 주소까지 알려주는 등과 같은 공작 계획이 수립되었음이 2017년 밝혀지게 되었다. 『연합뉴스』 2017년 10월 21일.

2) 배인준, 「반MB가 오뉴월에 MB를 도왔다」 『동아일보』 2009년 7월 1일.

빨갱이, 과격분자, 권위주의자, 투쟁지향적 인물 등과 같은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었던 게 사실이다. 1997년 12월, 그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은 환호를 했겠지만, 적지 않은 사람들은 정권 교체에 대해 비관적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또 어떤 사람들에게 그는 포용적이고 온건한 태도와 정책으로 화합과 협력의 정치를 했던 것으로 기억될 것이다.³⁾ 그의 사상이나 행동을 좀 더 깊이 살펴보면, 평화주의(pacifism)를 현실정치에서 실천한 정치인으로서 행보를 걸었다. 김대중 자신과 가족들이나 지인들까지 괴롭히거나 죽음으로 내몰려야 했던,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용서하며 상대에게 먼저 화해를 청했을 때, 그의 평화주의적 실천이 정치인으로서 허장성세의 수준에 머물러 있던 것인지, 아니면 그의 65년 공적 정치인으로서의 삶이나 개인의 인품에서 우러나온 것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그간 김대중의 평화사상은 통일사상 또는 평화통일방안, 대북정책 등의 맥락에서 이해되어 왔다.⁴⁾ 물론 1971년 대통령 후보 당시의 통일방안의 제안이나 2000년 6·15남북정상회담은 한반도 현대사에서 획기적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그의 사상과 정치 철학을 통일방안으로만 국한시키기에는 좁은 것이라고 본다. 김대중의 사상을

3) 한상진, 「내가 본 인간 김대중과 그 사상」, 김대중, 『21세기와 한민족』 (서울: 돌베개, 2004), 339쪽.

4) 이런 관점에서 연구된 업적들을 정리 해보면 다음과 같다. 최용섭, 「김대중 정부의 대북 화해협력정책에 대한 평가」 『한국동북아논총』 제25호 (2002); 정경환, 「김대중정부의 대북정책 평가와 향후 과제」 『통일전략』 제2권 2호 (2002); 박성희·김창숙, 「통일」 수사학의 현실과 이상: 김대중 전 대통령 베를린 연설과 박근혜 대통령 드레스덴 연설의 수사학 상황 및 의미 분석」 『수사학 21』 제21집 (2014); 김학재, 「김대중의 통일·평화사상」 『통일과 평화』 9집 2호 (2017); 최정준, 「대북 포용정책이 국방정책에 미친 영향 분석: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58집 2호 (2019). 필자의 관점에서 가장 가까운 글은 김학재의 「김대중의 통일·평화사상」이지만, 필자는 평화적 관점에서 김대중의 사상과 실천을 재구성하려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답을 그릇으로서 평화사상을 제안하며, 김대중의 평화사상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실천되었는가를 재구성해 보고자 한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 글에서는 우선 김대중의 평화주의 사상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를 살펴볼 것이다. 다음으로 김대중의 대표적인 정치적 트레이드마크이다시피 했던 평화통일론의 방점이 통일론에서 평화론으로 옮겨가게 된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다음으로 김대중의 정치인생과 함께 했던 호남에 대한 지역차별주의 문제를 살펴보면서 차별이라는 폭력을 평화로 극복하는 모습을 살펴볼 것이다. 이제 마지막으로 사회구조적 폭력으로서의 계급적 차별과 성차별 문제에 대한 관심과 지향과 함께 평화운동을 위한 주체로서의 시민사회 형성에서 김대중의 역할을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II. 김대중의 평화주의 사상은 어떻게 만들어졌나?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평화학은 새롭거나 통일론의 부수적인 존재였다. 그러나 2020년 즈음하여 평화가 대세를 이루며 평화학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있다. 평화에 대한 관심을 확산시키는 데에는 김대중, 노무현 두 전임 대통령의 대북 화해협력방안이나 특히 김대중의 햇볕정책, 최근 문재인 현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번영방안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런 과정에 갈통(J. Galtung)의 평화와 폭력이 국내에도 널리 소개되기 시작했다. 갈통은 평화와 반대되는 개념인 폭력으로서 전쟁이 직접적 폭력이라면 계급차별, 정치적 억압, 인종차별, 성차별, 문맹, 기아 등은 구조적 폭력, 그러한 폭력을 정당화하는 문화적 폭력으로 구분했다. 평화의 개념으로는 전쟁이 없다는 의미의 평화가 ‘소극적 평화(negative

peace)’라면, 모든 폭력의 부재 상태를 ‘적극적 평화(positive peace)’라고 보았다.⁵⁾ 개념적으로 평화와 폭력을 구분했으나, 모든 추상 수준의 개념에는 보편성과 특수성이 있다. 주관적 평화가 아니라면 평화라는 보편성은 시대나 사회, 문화마다 특수한 모습을 띠게 되어 있다. 세계적인 평화주의자로 존경을 받는 간디나 톨스토이 역시 시대와 나라는 다르지만 한 국가의 민주주의, 인권, 독립, 평화의 가치에서 나아가 인류의 평화를 위해 헌신했다.⁶⁾ 이제 과연 김대중의 평화주의 사상은 무엇이며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를 살펴보도록 한다.

1998년 김대중이 대통령으로 선출되기 전까지 오랫동안 그에게는 용공 과격분자라는 낙인이 찍혀 있었다.⁷⁾ 2000년 6·15 당시 국정원장이자 2001 통일부 장관에 이어 대통령 외교안보통일 특별보좌역을 역임했던 임동원조차도 1994년 김대중이 아시아태평양평화재단 사무총장으로 임동원을 영입코자 비서실장 정동채를 보냈으나, 임동원은 김대중이 빨갱이, 과격분자, 거짓말쟁이라는 선입견을 떠올려 제안을 거절했다는 얘기는 세간에 유명하다.⁸⁾ 용공 과격분자로 오랫동안 인식되어온 김대중은 어떻게 평화주의자의 삶을 살았는가?

시몬느 드 보부아르(Simone de Beauvoir)는 “여성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여성으로 만들어진다”라는 말했다. 이 말을 좀 더 깊이 성찰하면 여성만이 아니라 모든 인간은 태어날 뿐만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 즉 인간은 태생적으로 획득된 자연 그 자체가 아니라, 주변 사회환경과 사회관계에 깊은 영향을 받으면서 자라게 된다. 또한 인간은 사회관계에 반응하는 조건이나 개별적 성향에 따라 크고 작은 차이를 형성하게 된다.

5) 요한 갈통 저, 강종일 외 역, 『평화적 수단에 의한 평화』 (서울: 들녘, 2000), 18쪽.

6) 박홍규, 『함석헌과 간디: 평화를 향한 같고도 다른 길』 (서울: 들녘, 2015).

7) 이희호, 『이희호 자서전 동행』 (서울: 웅진지식하우스, 2008), 154쪽.

8) 『경향신문』 2020년 5월 30일.

김대중 역시 태어날 때부터 평화주의자였다고 보기는 힘들 것이다. 김대중이 수감 중 막내 아들 홍걸(21대 무소속 국회의원)에게 보냈던 옥중 서신(1980년 12월 7일자)을 잠시 살펴보자.

사랑하는 홍걸아! 아버지는 누구도 원망하지 않고 누구도 미워하지 않는다. 아버지가 이런 마음의 변화를 갖게 된 것은 지난번 3년의 감옥 생활 당시에 하느님의 가르침에 대한 많은 책을 읽고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을 묵상하여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가운데 내가 참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그 길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뿐 아니라 아버지는 나 자신이 일생 동안 저지른 잘못 그리고 품었던 사악한 마음을 남은 몰라도 스스로는 알고 있다. 그러한 나의 죄를 스크린에 비치듯이 주님 앞에서 하나하나 열거해갈 때 과연 내가 누구를 심판하며 누구를 단죄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남을, 원수조차 용서해야 한다.

용서는 하느님 앞에 가장 강한 사람만이 할 수 있으며 용서는 모든 사람과의 평화와 화해의 길이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해야 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자기를 처형한 사람들을 용서하신 것을 우리는 헛되어 해서는 안 된다. 용서를 위해서는 상대방의 입장에 한번 서서 이해해보는 것이 아주 효과적인 방법일 수 있다. 나는 네가 일생 동안 남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생활을 하려고 노력한다면 반드시 너의 장래는(물질적으로나 사회적 지위와 명성으로는 어떠한 처지에 있건) 결코 후회 없는 평화와 기쁨의 일생을 보낼 수 있으리라고 확신한다. 아버지는 이러한 일을 너무 늦게 깨달은 것을 한스럽게 생각한다.⁹⁾

투옥 중인 그는 수시로 아내인 이희호 여사(이하 이희호로 칭함)와 일상적인 대화의 글이나 정치 활동과 관련된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편지 가운데 아들들, 조카들, 며느리, 손주에게도 격려를 보내거나 미안함과 감사의 인사를 하기도 하고, 부모이자 선배로서의 덕담과 조언을 아끼지

⁹⁾ 김대중, 『옥중서신 1』 (서울: 시대의 창, 2009), 174~175쪽.

않았다. 어린 막내아들에게 보낸 글에서도 아버지의 자식 사랑이 짙게 배어 있었다. 때로는 좋은 책을 안내하거나 세상을 보는 관점이나 태도를 얘기하는 멘토이기도 하고, 때로는 인생을 먼저 살아온 선배처럼 편하게 말하기도 한다. 편지 곳곳에서, 그는 갖은 시국사건으로 고통을 겪고 있어서, 사춘기 아들에게 아버지로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음에 대해 죄책감과 사랑을 표했다. 자신의 고백적인 표현처럼 원래 평화주의자는 아니었을지 모르지만, 그는 정치적 시련 속에서 예수와 기독교에 대한 믿음을 키웠다. 또한 그는 독서와 사색을 통해 역사와 사상을 포함한 다방면의 공부를 거치면서 용서와 평화, 화해의 가치를 신념화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물론 기독교 신심이 깊은 여성운동가이자 지성적인 지식인이고 낙천적이면서도 당찬 아내였던 이희호와의 깊은 신뢰와 사랑과 존경¹⁰⁾이 김대중의 인격을 보다 더 성숙하도록 도와주며 평화주의자가 되게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김대중은 1973년 김대중납치사건, 1976년 '3·1 구국선언'을 주도한 혐의로 긴급조치 9호에 최종 5년형, 병원 및 가택 연금 등으로 수난의 청·장년기를 겪었다. 1980년, 너무도 짧았던 '서울의 봄'과 '김대중내란음모 사건'¹¹⁾이라는 초대형 조작사건으로 그는 사형 언도를 받았다. 그 후 미국 망명(사실상의 추방) 생활과 귀국 후 거듭되는 가택 연금, 1987년 6월 항쟁과 정치적 해금과 사면 복권, 1987년 제13대 대통령 선거 낙선, 1992년 제14대 대통령 선거 낙선과 정계 은퇴 선언과 같은 넘어도 넘어도 끝이

¹⁰⁾ 이희호, 『이희호 자서전 동행』, 390~391쪽.

¹¹⁾ 1980년 5월 17일, 그해 4월부터 시작된 민주화운동이 5월 중순이 되어 전국으로 확산되자 전두환 신군부정권은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김대중 등을 체포 구속하여 '김대중내란음모사건'을 조작하였다. 9월 17일 고등군법회의는 그에게 사형 선고를 했고, 12월 4일 대법원에서 사형을 확정했다. 사형 확정 선고를 당하여 아들에게 이러한 평화주의적 편지를 썼다는 것만으로도 평범한 사람으로서는 생각하기 어려운 일이라 할 수 있다.

없을 것 같은 지리산 능선을 그는 인동초처럼 두뼘두뼘 넘어갔다. 그는 감옥에서나 가택의 연금생활에서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으려 했다. 성경 공부부터, 토인비의 『역사의 연구』 외 동서양 역사책, 칸트의 『실천 이성 비판』, 갈브레이드의 『불확실성의 시대』와 『경제학과 공공목적』, 슬제니친의 『암병동(영문)』¹²⁾ 등이나 국제 뉴스를 놓치지 않고 따라가기 위해 『코리아 타임즈』나 *Time, Newsweek*를 비롯한 국내외 신문 등도 쉬지 않고 읽었다. 수감 중에 그가 가족들에게 영치하도록 주문을 했던 옥중 독서 목록 중 하나인 <표 1>을 보자.

김대중의 박학다식함이 평소의 꾸준한 독서 생활에서 나왔다는 것은 정평 난 사실이다. 감옥도 인동초의 꿈을 꺾을 수 없었다. 열악한 감옥 속에서 그는 성실한 독서 생활을 통하여 인동초에 자양분을 제공했다. 또한 그가 감옥에서 이희호에게 지속적으로 부탁했던 비밀 물품에는 볼펜, 연필, 글을 쓸 수 있는 작은 못이 있었다. 일제 강점기로부터 한국의 구금 시국사범에게는 볼펜 등 필기도구 소지가 불가사항¹³⁾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김대중은 수감생활에서 비밀리에 반입된 못을 포함한 필기도구로 편지는 말할 것도 없고, 적지 않은 분량의 보고서를 작성했다. 성경 공부, 국내와 세계 정세, 운동 방향과 전략·전술, 신앙고백, 회고록, 독서 메모 등의 내용이 관제 엽서에 깨알같이 쓰여 있거나 과자 종이나 껌 종이에 못으로 눌러져 기록되었다.

열악한 감옥 생활과 가택 연금, 해외 생활 중에서 독서와 사색, 글쓰기, 강연 및 인터뷰 등으로 그의 평화와 통일의 관점은 좀 더 풍부해지고 현실화하여 갔다.

1978년 8월 29일¹⁴⁾ 그는 이희호를 통해 정치적 동지들에게 전달하는

12) 이희호, 『이희호 자서전 동행』, 197쪽.

13) 『경향신문』 1991년 2월 23일.

14) 1976년 3월 1일, 김대중은 윤보선, 정일형, 함석헌, 문익환, 김지하 등 재야 민

〈표 1〉 김대중의 옥중 독서 목록의 사례(1981. 3. 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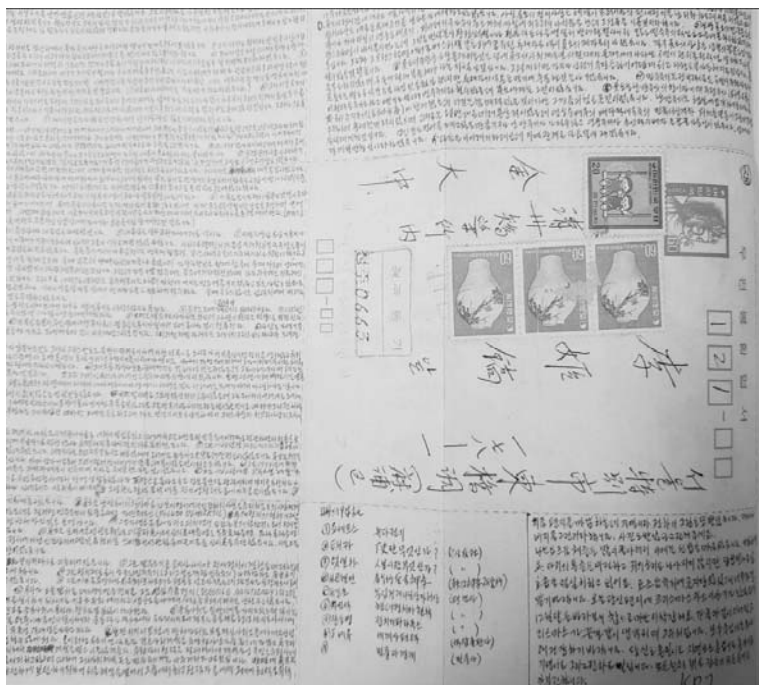
- 1) 월터 니, 《프리드리히 니체》(분도출판사)
- 2) 월터 니, 《도스토예프스키》
- 3) 월터 니, 《위대한 성인들》
- 4) 니체,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문예출판)
- 5) B. 레설, 최민홍 역, 《서양철학사》 상·하
- 6) 마루야마, 《일본의 현대사상》(종로서적 출판부)
- 7) 존 히, 《종교철학》
- 8) 최명관 역, 《플라톤의 대화》
- 9) 지베스, 《과학정신과 기독교신앙》
- 10) W. 리프만, 《민주주의의 몰락과 재건》(대한기독교서회)
- 11) 진단학회, 《한국사》(제7권, 을유문화사)
- 12) 《일본문화의 원류로서의 비교 한국문화》(삼성)
- 13) 버클리, 《바울로의 인간과 사상》(기독교문화)
- 14) 로빈슨, 《신에게 솔직히》(대한기독교서회)
- 15) 코헨, 《만인의 탈무드》
- 16) 노만 제이콥스, 《대중시대의 문화와 예술》
- 17) 버논, 《다국적 기업》(현암사)
- 18) 변형윤, 《한국경제의 진단과 반성》(지식산업)
- 19) 임종철, 《국제경제론》(일신사)
- 20) 토인비, 강기철 역 《도설, 역사의 연구》
- 21) 《신전략 사상사》(기린원)
- 22) E. 카잔, 《아메리카 아메리카》
- 23) 유동식, 《한국종교와 기독교》

문학부문

- 1) 도스토예프스키, 《백치》《악령》《미성년》
- 2) 톨스토이, 《부활》
- 3) 고골리, 《죽은 녀》
- 4) 까뮈, 《이방인》(신문출판사)
- 5) 디킨스, 《크리스마스캐롤》
- 6) S. 모옴, 《인간의 굴레》
- 7) 파스테르나크, 《의사 지바고》
- 8) 까뮈, 《시지프스의 신화》(왕문사)
- 9) 니체,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인문출판사)
- 10) 司馬遼太郎(시바 료타로), 《徳川家康》상·하

* 출처: 김대중, 『옥중서신 1』, 205~206쪽.

〈그림 1〉 이희호에게 보낸 김대중의 엽서



* 출처: 김대중, 『옥중서신 1』, 부록.

박정희 독재정권에 대한 저항 운동 지침을 담은 옥중서신에 평화적 운동 방식을 명확히 하고 있다.

주지도자들과 '3·1 구국선언'을 주도한 혐의로 긴급조치 9호에 의해 구속되어 1심에서 징역 8년형 선고를 받고, 1977년 3월 23일에는 대법원에서 징역 5년, 자격 정지 5년형을 확정받았다. 1977년 12월 22일, 그는 납치 및 고문 후유증에 따른 지병으로 서울대 병원으로 이송되어 교도소 때보다 제한된 감시를 받던 상황이었다. 그해 12월 27일, 옥고 2년 9개월 만에 형집행정지로 가석방되어 장기 가택연금을 당했다. 조한서, 『고난의 언덕에 핀 꽃 김대중』 (서울: 작은 씨앗, 2009), 228쪽.

- ⑤ 결론의 (가) 상대의 약점을 찔러야 함
- ㉠ 무슨 사건에서 상대가 선별적으로 구속하지 못하도록 참가자 전원이 자진해서 실어가는¹⁵⁾ 버스에 타거나 경찰서로 몰려가는 시위와 투쟁이 필요하다. 간디와 킹 목사에게서 배워야 한다.
- ㉡ 지금의 구속이 저들만의 장점이 아니라 우리의 장점이 되어가고 있다.
- ㉢ 구속당하는 자가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자원하면 그 효과가 역으로 됨은 전기 간디와 킹 목사의 경우는 물론 지금 우리의 현실에서도 입증된다.
- ㉣ 항시 말하지만 전국의 감옥을 정치범으로 채울 각오를 하면 우리는 승리한다.
- ㉤ 한국의 여건에서 폭력투쟁은 나라를 위해 불리하고 상대가 또 이를 악용한다.
- ㉦ 비폭력으로 집요하게 투쟁해야 할 것임.¹⁶⁾

그는 간디와 킹 목사의 비폭력저항방식을 한국 민주화운동의 전략으로 제시했다. 실제로 그 방식이 현실화된 것은 1979년 4월 윤보선, 함석헌, 문익환 등과 함께 그는 공동의장으로 참여한 ‘민주주의와 민족통일을 위한 국민연합’ 주도의 반독재투쟁 과정이었고, 그는 비폭력저항운동으로 3차례 연행되었다.

김대중의 비폭력저항운동의 근저에는 신앙적 차원 외에 민주주의에 대한 두터운 신념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는 폭력투쟁으로는 독재를 뿌리뽑지 못하고 오히려 독재자가 악용하게 되므로 비폭력으로 집요하게 투쟁해야 승리할 수 있다는 신념을 밝혔다. 그런 점에서 20년 가까운 양숙이자 김대중을 고난의 삶으로 밀어 넣었던 박정희 전 대통령(이하 박정희로 칭함)에 대한 피격사건을 그는 기뻐하지 않았다.

15) ‘실려가는’으로 표기해야 하지만, 원문 그대로임을 밝힘. 김대중, 『옥중서신 1』, 88쪽.

16) 김대중, 『옥중서신 1』, 88-89쪽.

박정희 씨가 죽음으로써 한국은 기로에 섰었는데, 실은 김재규 씨의 암살 사건이 없었더라면 한국 사람은 그때 자력으로써 민주 해방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했었다라면 전두환 씨의 집권은 있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유신체제가 그대로 남아서 머리만이 잘려진 셈입니다. 사람은 머리를 잘리면 죽지만 조직은 머리가 잘리면 다른 머리로 갈아 붙입니다. 정권도 그렇습니다. 그리하여 전두환 씨가 제2의 머리로 나온 것입니다.¹⁷⁾

김대중이 역사를 보는 관점은 평화주의적이자 총체적이다. 그는 아무리 폭력적이고 독재적인 상대일지라도 평화적이고 민주적으로 이겨야 또 다른 폭력과 독재의 회귀를 막을 수 있다고 보았다. 그는 김재규의 암살사건으로 오히려 정국이 불안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고 민주화운동을 전두환이 집권을 위한 빌미로 삼으며 공포정치에 의해 민주주의가 지연되고 말았다고 보았다.

그는 민주주의를 신뢰하면서 평화적 방식으로 정권을 창출하는 것을 순리로 보았다. 김대중의 민주주의 개념과 사상은 *Foreign Affairs* 1994년 11~12월 기고문, 「문화란 운명인가?」에서 잘 나타나 있다. 1994년 당시 김대중은 아·태평화재단 이사장으로서 정치 복귀를 선언하였다. 그는 그 기고문에서 싱가포르 전 수상 리관유(李光耀)가 *Foreign Affairs* 1994년 3~4월에 인터뷰했던 내용에 대한 반박을 토대로 자신의 사상을 드러냈다.¹⁸⁾ 리관유의 주장은 아시아와 서유럽 간의 문화적 차이로 서구의 민주주의와 인권이 아시아에는 적용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대중은 아시아나 한국에는 유럽과 다른 철학과 전통의 민주주의가 있고,

17) 야스에 료스케(安江良介)는 당시 일본의 이와나미쇼텐(안파서정) 편집장으로 서 1983년 5월 워싱턴에서 체류하고 있던 김대중을 인터뷰하여 그 결과물을 세카이(『世界』) 9월호에 게재했다. 야스에 료스케·김대중, 「한국 현대사가 묻는 것」(『世界』 9월호, 1983), 정진백 엮음, 『김대중 대화록 1973~2008』(광주: 도서출판 행동하는양심, 2018), 103쪽.

18) 김대중, 「문화란 운명인가?」 *Foreign Affairs* 11~12월 (1994).

오히려 아시아에는 서구 민주주의보다 높은 수준의 민주주의를 발전시킬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을 했다. 그 근거로서 맹자의 혁명 사상과 동학의 인내천 사상을 민주주의 사상으로 해석하였다.¹⁹⁾

그런데 김대중의 그러한 사상과 주장은 이미 1970년대부터 그 맹아를 찾을 수 있다. 그는 중국 유교의 순천자(順天子) 사상이나 맹자의 폭군방벌(暴君放伐)론 속에서 “만일 인민을 위해 봉사하지 않는 임금이 있으면, 그런 임금은 인민이 일어나서 쫓아낼 권리가 있다”²⁰⁾고 하여 인민에 의한 민주혁명의 맹아를 보았다. 물론 공자나 맹자의 폭군방벌론이나 선양론은 결과론적으로 승자의 권력창출이나 쿠데타를 정당화하는 논리로 사용되어 왔다²¹⁾는 점을 놓쳐서는 안된다. 또한 김대중은 동학의 인내천 사상과 동학 운동에서 민주주의의 가능성을 보았다. 즉,

그들은 노예를 해방시켰습니다. 그때까지 젊은 여성이 결혼해서 남편이 죽으면 일생 동안 과부로 지냈어야 했는데, 그런 바보스러운 일은 없다고 재혼을 허락했습니다. 탐관오리의 재산을 몰수하여 농민에게 나누어 주고, 토지는 균등하게 분작시키는 생각을 내놓는 등, 농민 중심의 개혁을 하려고 했습니다. 이 갑오년 봉기는 청일전쟁으로 일본이 개입하여 일본의 무력으로 부수어지고, 전봉준 등은 처형되고 말았습니다. 만일 일본이 개입하지 않았더라면, 그때에 민주혁명이 성공했을 것입니다.²²⁾

19) 한상진은 김대중이 리관유의 ‘아시아적 가치’를 부정한 것이 아니라 다른 시각으로 봤음을 강조했다. 즉 아시아 문화에 존재하는 인권과 민주주의에 부합하는 요소가 많음을 논증한 것으로 설명했다. 한상진, 「내가 본 인간 김대중과 그 사상」, 355~356쪽.

20) 安江良介(야스에 료스케)·김대중, 「한국 민주화의 길」(『世界』 9월호, 1973), 정진백 엮음, 『김대중 대화록 1973~2008』(광주: 도서출판 행동하는양심, 2018), 45쪽.

21) 장현근, 「방벌(放伐)과 선양(禪讓)의 이중주 - 초기 유가사상의 정권에 대한 정당화」 『한국정치학회보』 제46권 1호, (2012), 22~23쪽.

22) 당시 세카이(『世界』) 편집장이었던 야스에 료스케(安江良介)와의 인터뷰는 1973년 7월 13일, 도쿄에서 이루어졌다. 安江良介(야스에 료스케)·김대중,

김대중은 동학의 인내천 사상과 평등사상을 민주주의의 근간으로 보았고, 독재를 민주주의의 적으로 보았다. 1961년 5·16군사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가 독재자가 된 것도 당연한 순서로 보았다. 그는 야스에와의 인터뷰에서 박정희 정권의 첫째 특성은 군사정권인데, 군사주의적 사고의 특징은 적에 대해 “죽여 버리지 않으면 안된다”는 사고방식에 있다고 보았다.²³⁾ 그러한 특성에 따르면 박정희에게 민주주의야말로 자신의 뜻을 거스르는 적일 수밖에 없으므로 그는 힘이 약할 때는 민주주의를 보호하는 태도를 취했지만, 막강한 권력을 갖게 되던 1969년 3선개헌 이래로 1972년 유신 개헌까지 밀어붙일 수 있었던 것으로 김대중은 이해하였다. 그러한 독재정권 앞에 목숨을 내놓고 저항하는 김대중에 대해 박정희는 참을 수 없는 것이었고, 그 결과 박정희정권 하에서 김대중은 4번의 죽을 고비에 직면하게 되었다.

Ⅲ. 김대중의 평화사상과 실천

이 글에서는 김대중의 평화사상과 실천을 네 가지 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김대중의 평화통일론에 담긴 평화론, 둘째, 문화적 폭력으로서의 지역차별주의 문제, 셋째, 사회적 폭력 문제로서 노동자차별과 성차별 문제를 짚어보고, 마지막으로 평화적 방법으로서의 시민사회운동과 비폭력저항운동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한국 민주화의 길」, 46쪽.

23) 위의 글, 32쪽.

1. 김대중의 통일에서 평화로

김대중의 평화통일론²⁴⁾은 1971년 대통령 후보 이전으로 거슬러간다. 이미 1960년대 김대중은 국회의원이었던 시기부터, 통일논의를 용공으로 몰아 탄압하고 야당과 양심세력을 반공법과 국가보안법으로 억압한 박정희 정권의 폭압정치를 규탄했다. 1964년 10월 26일 국회 본회의 대정부 질의에서 구 소련의 흐루시초프의 실각, 중공(중국)의 핵실험 성공, 영국 노동당 정권의 등장, 한일회담의 급격한 추진 등 급변하는 내외 정세 속에서 정부도 통일문제에 대한 제대로 된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통일문제에 대해 연구를 전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제안하면서, 중립화 통일론의 가능성에 대해 발언하기도 했다.²⁵⁾ 당시만 해도 통일부²⁶⁾가 설치되기 전이었다. 통일 및 남북문제에 대해서 대통령과 중앙정보부가 독점하고 있던 상황이었어서, 정부 방침과 다른 주장을 하는 사람은 반공법이나 국가보안법에 저촉될 수 있는 때였다.

그 무렵 황용주 필화사건이 발생했다. 월간지 『세대』의 자문위원이었던 황용주(1918~2001)는 박정희와 대구사범학교 입학 동기(1932년)였다. 그는 일제 강점기 독서회 사건으로 퇴학당한 바 있다. 그는 와세다대학

²⁴⁾ 대통령 후보 중 최초로 평화통일론을 표명한 사람은 조봉암이다. 조봉암의 ‘우리의 당면과업’과 진보당(1956년 11월 10일 창당)추진위원회 당론으로 평화통일론을 발표했다. 조봉암은 한반도 분단이 강대국의 패권정치의 결과로 인식하여 민족의 힘만으로는 국제적 제약을 극복할 수 없음을 직시하여 중도민주역량을 통해서 평화통일을 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보당 창당 이후에는 국제적 여건보다 남북 당국의 역할을 제고하는 것으로 변화시켰다. 그러나 구체적인 통일안은 공개하지 않았다. 정진아, 「조봉암의 평화통일론 재검토」 『통일인문학』 통권48호 (2009), 80쪽; 이현주, 「조봉암의 평화통일노선에 대한 검토(1946~1958)」 『한국근현대사연구』 제18호 (2001), 216쪽.

²⁵⁾ 김대중, 『공화국연합제』 (서울: 학민사, 1991), 11~25쪽.

²⁶⁾ 통일부는 1969년 국토통일원으로 출범하였다.

불문과를 거쳐 학병으로 갔다 왔고, 해방 후 의열단장 약산 김원봉의 비서로 일을 했던 전력이 있었다. 박정희의 5·16군사쿠데타를 민족주의적 입장에서 동조했던 것 같다.²⁷⁾ 월간 『세대』(1963년 1월 창간)에 황용주는 1964년 7월호부터 한국의 반공적 정치 분위기나 유엔(사실은 미국) 의존 문제에 대해 통렬하게 비판하기 시작했다. 그해 11월호에 쓴 황용주의 글, “강력한 통일정부에의 의지”라는 글에서 “오늘날 왜 우리들 한반도 안에 통일되고 강대국으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정부가 수립되어 있지 않을까”하는 문제를 제기했다.²⁸⁾ 그는 민족자주에 기반한 중립화 통일론을 제창했다는 혐의로 그해 11월 11일 구속되었고, 1965년 4월 30일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고 반년 만에 출소했다.

황용주 필화사건 직후인 11월 16일 경향신문 편집부는 김대중을 포함한 각계 저명인사들에게 황용주 사건에 대한 의견을 질문했고, 김대중은 다음과 같이 답했다.

용공(容共)적 동기 아니면 김대중(국회의원, 민주당)

우리가 당면한 통일논의는 원칙보다 방법이 문제이다. 방법은 원래 다양한 것이고 따라서 통일론 또한 여러 가지 면에서 검토 제기될 수 있다.

물론 우리의 입장에서는 통일을 논할 때도 반공의 일선은 명확히 해야 하지만, 반면에 이를 대하는 정부 또한 그것이 용공의 동기에서 출발한 것이 아닌 한 통일논의에는 상당히 넓은 폭을 주고 모든 국민의 내재적 견해를 양성화시켜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정부의 견해와 상이된 점에 대하여는 이를 지도·설득시키는 것이 민주정부가 취할 자세일 것이며 이러한 자세야말로 민족의 단결된 역량으로 통일과업을 성취시키는 길이 될 것이다. 물론 법적으로도 용공적인 동기와 내용이 아닌 이상 처벌 될 수는 없는 것이다.²⁹⁾

²⁷⁾ 안경환, 『황용주: 그와 박정희의 시대』 (서울: 까치, 2013), 366쪽.

²⁸⁾ 위의 책, 420쪽.

김대중은 사상과 표현의 자유에 ‘용공’ 또는 ‘반공’이라는 기준을 설정해 뒀으나, 통일논의를 위한 방법론적 다양성의 표현을 법적으로 인정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아마도 그런 과정에 김대중의 통일문제에 대한 인식이 좀더 깊어지고 방법론에 대한 생각도 다각화되어 갔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또한 1966년 7월 1일 국회 본회의의 대정부 질의는 보다 더 날카로웠다. 공화당 정부의 반공통일정책이나 냉전적 외교정책 등을 비판하면서 세계가 데탕트 분위기로 변하고 있음에 따라 한국도 실리, 자주 외교를 추진해야 하며, 야당 탄압을 위한 반공논리를 중단하고, 야당 정치가들이나 학자들에게 통일논의의 자유를 부여할 것을 주장하기 시작했다.³⁰⁾

1971년 3월 24일, 그는 7대 대통령후보 선거공약으로 ‘3단계 평화통일론’을 내놓았다.³¹⁾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1단계는 전쟁억제·긴장완화, “우리가 무력에 의한 침략은 하지 않는다. 무력에 의한 통일은 하지 않는다. 이북이 전쟁을 해오지 않는 이상은 우리는 전쟁 안한다” 이런 태도를 천명할 필요가 있어요. (……) 동시에 우리는 소련이긴 중공이긴 모든 나라에 대해서 “그쪽에서 우리를 괴롭히지 않는 한 우리가 적대하지 않는다”하는 그러한 평화선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 제2단계, 우리는 남북간의 교류를 확대시켜 나가야 합니다. 기자교류·체육교류 혹은 편지교환, 예술인들·문화인들 왕래를 해, 이렇게 해서 서로 이북도 가고, 이북서 여기에 오고, 라디오도 서로 듣고, 이러한 가운데에서 우리가 차츰 상대방에 대해서 이해를 갖게 되고 또 적대감이 감소됩니다. (……) 그리고 제3단계로는 정치적 통일을 꾀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지금 현재 남북간의 극단의 대립과 30년 동안 전연 이질적으로 발전되고, 정치적·경제적·사회적 제도, 이러한 여건으로 해서, 또 국제정세로 보아서 아까 말씀한

29) 『경향신문』 1964년 11월 16일.

30) 김대중, 『공화국연합제』, 26~56쪽.

31) 위의 책, 91~101쪽.

바와 같이 이 통일이 그렇게 빨리 쉽게 올 길로는 보지 않습니다.³²⁾

김대중의 평화통일론은 제7대 대통령 선거의 판세를 바꾸었다. 그해 4월 27일 선거일까지 김대중에 대한 끊임없는 용공조작은 말할 것도 없고 온갖 모함, 방해 공작, 지방색 부추기기 등에도 불구하고 김대중이 유세하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운집하였다. 박정희 정권은 선거운동으로부터 투·개표에 이르는 전 과정에 부정을 저질렀다.³³⁾ 심지어 김대중과 이희호의 표가 무효 처리되는 상황에서 김대중은 94만 7천여 표 차이로 낙선했다. 대통령 선거운동 과정에서 그는 한국 내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국제적으로도 지명도가 생겼던 것으로 보인다. 1972년 3월 11일, 종로구 수운회관에서 열린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 5개국 순방 귀국보고 강연회에서 3단계 평화통일론을 앞으로도 계속 전개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³⁴⁾

한편 1961년 5·16군사 쿠데타 이래로 박정희와 그 정권은 혁명공약 1호로서 반공제일주의를 내세워 북한과의 평화통일논의 자체를 금기시해왔다. 1971년 선거 과정에 김대중이 평화통일론을 제창하자, 그는 용공·좌경 빨갱이로 낙인찍혔다. 그러던 박정희 정권은 1971년 7월 적십자회담을 북측에 제안하여 이산가족찾기 남북합의를 가져오더니, 급기야 북한과의 비밀회담을 통해 1972년 7·4남북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그 외 박 정권은 김대중의 대통령 후보 공약 중 하나였던 향토예비군 제도 대폭 개선을 시행하며 민심의 누수현상을 막는 제스처를 취했으나, 1972년 10월 17일 유신헌법을 선포하여 영구집권의 길을 다지기 위해 긴

32) 김대중, 『공화국연합제』, 121~122쪽.

33) 이희호, 『이희호 자서전 동행』, 102~109쪽; 조한서, 『고난의 언덕에 핀 꽃 김대중』, 110쪽.

34) 『동아일보』 1972년 3월 13일.

급조치 시대를 열었다.

김대중의 트레이드마크가 된 평화통일론이 새로운 변화를 하게 된 것은 1993년이였다. 그는 1992년 대통령선거에서 다시 낙선하고 정계 은퇴 선언을 한 이후 1993년 영국 캠브리지대학에서 연구활동을 할 때였다. 그는 통일 독일, 유럽공동체의 관점에서 유럽과 미국의 관계를 연구하는 과정에 한반도 평화 통일에 대한 새로운 가능성과 전망을 고찰하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1993년 7월, 그는 귀국하여 1994년 아태평화재단(전 아시아태평양평화재단)을 세워 한반도의 평화적 민주적 통일의 이념과 정책을 연구 개발하고 민주화가 확고히 정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며 세계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연구 개발하려는 목표로 활동해 나가기 시작했다. 그는 임동원³⁵⁾을 비롯한 각 방면의 정치가, 전문가 등을 영입하거나 교류했던 것 같다. 1995년 7월, 그는 정계 복귀를 선언하고 새정치국민회의를 창당하면서 대통령을 향한 길로 다시 나아갔다. 귀국 후 그가 밝힌 평화통일 방안을 살펴해보도록 하자.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독일식 흡수 통합을 꿈꾸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흡수 통합을 하게 되면 경제적 부담과 오랫동안 갈라져 있던 정신적 갈등을 막을 길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평화 공존·평화 교류·평화 통일의 3원칙 아래 3단계 방식에 의한 통일을 추진해서 아주 확실하고 안전하게 통일을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한 마디로 말하면 “통일은 빨리 시작하되 진행은 단계적으로 하자”는 것입니다.³⁶⁾

35) 임동원 전 통일부장관을 영입하는 과정에서 김대중이 삼고초려한 것은 유명하다. 임동원은 김대중과의 만남에서 나눴던 예리한 분석력과 판단력, 통일철학과 비전, 논리 정연함에 감탄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임동원, 『피스메이커』(서울: 중앙북스, 2008), 308~316쪽.

36) 김광수, 「세계사의 흐름과 철학의 위치」 『현실과 철학』 겨울호 (1993); 정진백 엮음, 『김대중 대화록 1973~2008』 (광주: 도서출판 행동하는양심, 2018(재수록)), 388~389쪽.

김대중은 통일의 3원칙 3단계안을 1971년부터 2000년 남북정상회담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주장했다. 공화국연합제 안은 유지하였으나, 독일 식 흡수 통합(통일)을 명백히 반대하면서, 한반도에 전쟁을 피하기 위하여 할 수 있는 모든 접촉/교류를 하면서 북한이 체제를 전환하지 않더라도 개방하여 미국이나 서방 국가들과의 관계가 정상화되도록 지원하는 태양정책³⁷⁾을 통하여 화해협력을 모색하며, 평화 공존의 길을 찾으려 했다. 김대중의 통일 원칙은 아태평화재단을 수립하고 난 후 1997년 12월 대통령 선거 과정에 보다 구체화 되었다.

그리고 남북한의 직접 대화를 통해서 우리 문제는 우리 민족끼리 해결하는 것을 모색하겠습니다. 여기에는 남북합의서이행이 가장 중요한 요건이 될 것입니다. 남북합의서는 남북한 양쪽이 함께 준수해야 할 국제적인 조약입니다. 저는 북한에 대해 남북합의서에 기초한 대화의 재개를 제안합니다. 현재 우리의 목표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며, 남북한 간의 교류와 협력입니다. 통일은 그 이후 점진적으로 실현해야 할 문제입니다. 남북한 특사를 교환해서 남북합의서 실천방안을 논의할 것을 북한 측에 제안합니다. 또 필요하다면 김정일 총비서와 정상회담을 갖는 것도 제안하겠습니다.³⁸⁾

1997년 12월 19일 대통령당선자로서 기자회견을 했던 김대중은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를 이행하면서 한반도 평화와 안정, 교류와 협력을 제1의 실천방안으로서 제시하며, 통일은 후대 문제로 남겨 두었다. 이는 1998년 1월 22일 아사히신문과의 인터뷰에서도 “지금은 통일보다는 평화와 공존

37) 1993년 당시 김대중은 태양정책(sunshine policy)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으나, 이후 햇볕정책으로 호명했다. 로버트 스칼라피노 · 김대중, 「북한과 북한의 핵을 어떻게 볼 것인가」(1993), 정진백 엮음, 『김대중 대화록 1973~2008』(광주: 도서출판 행동하는양심, 2018), 435쪽.

38) 연세대학교 김대중도서관 편, 『김대중 전집 I』 제1권 (서울: 연세대학교 대학출판문화원, 2015), 4쪽.

으로 나아가야할 단계”³⁹⁾임을 명시적으로 이야기했고, 자신의 역할의 방향을 설정했다.

1998년 2월 25일, 15대 대통령 취임사에서도 자신의 평화에 대한 소신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남북관계는 화해와 협력, 그리고 평화정착에 토대를 두고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분단 반세기가 넘도록 대화와 교류는 커녕 이산가족이 서로 부모 형제의 생사조차 알지 못하는 냉전적 남북관계는 하루빨리 청산되어야 합니다. 1,300여 년간 통일을 유지해 온 우리 조상들에 대해서도 한없는 죄책감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남북문제 해결의 길은 이미 열려 있습니다. 1991년 12월 13일에 채택된 남북기본합의서의 실천이 바로 그것입니다. 남북 간의 화해와 교류·협력, 불가침, 이 세 가지 사항에 대한 완전한 합의가 이미 남북한 당국 간에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그대로 실천만 하면 남북문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통일의의 대로를 열어나갈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북한에 대해 당면한 3원칙을 밝히고자 합니다.

첫째, 어떠한 무력도발도 결코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둘째, 우리는 북한을 해치거나 흡수할 생각이 없습니다.

셋째, 남북 간의 화해와 협력을 가능한 분야부터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⁴⁰⁾

취임사의 논조를 같은 날 대통령 취임 경축 만찬에서도 “한반도 평화는 우리의 지상과제”라고 명시하고 있다.⁴¹⁾ 1971년 대통령후보 시절 기상 높았던 김대중의 평화통일론이 1998년 제15대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평화 공존과 남북 화해와 교류·협력 노선으로 변화한 것은 어찌 보면 적극적인 통일의 관점에서 보면 후퇴일 수 있다. 그러나 50년이 넘는 분단 시대 남북의 크나큰 차이와 대결과 깊은 불신을 그냥 두고 통일을 애

39) 위의 책, 36쪽.

40) 위의 책, 74쪽.

41) 위의 책, 77쪽.

기하는 것은 오히려 비현실적으로 보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통일에서부터 평화로 강조점이 이행된 김대중의 현실주의적 정치관을 시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2000년 6·15남북정상회담을 성공리에 마치고, 6·15남북공동선언을 통하여 이산가족 문제와 경제 분야, 군사 분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당국간 회담이 다음과 같이 추진되었다.⁴²⁾

〈표 2〉 김대중정부 5년간 남북대화 추진상황

구분	합계	1998	1999	2000	2001	2002
합 계	71회	2회	2회	26회	8회	33회
남북정상회담 및 관련 접촉	12회			12회		
남북장관급회담 및 실무접촉	9회			4회	2회	3회
남북군사분야회담	16회			4회	2회	10회
남북경제분야회담	20회			3회	3회	14회
남북접십자회담 및 실무접촉	6회			2회	1회	3회
남북체육분야 회담	2회					2회
남북특사회담	2회			1회		1회
정상회담 이전 남북회담	4회	2회	2회			

* 통일부, 『국민의 정부 5년간 대북정책 성과』(서울: 통일부, 2002); 최용섭, 「김대중 정부의 대북 화해협력정책에 대한 평가」 『한국동북아논총』 제25호, (2002), 82쪽(재편집하여 인용함).

분야별 당국간 회담에서 가장 많은 분야가 경제분야이다. 2위가 군사 분야이다. 군사분야회담은 전쟁 없는 평화의 한반도 수립을 직접적인 목표로 두고 있다. 그런데 경제분야회담을 둘러싼 김대중의 생각은 경제적 이익에만 치중되어 있지 않다.

42) 최용섭, 「김대중 정부의 대북 화해협력정책에 대한 평가」 『한국동북아논총』 제25호 (2002), 81쪽.

(……) 과거 남북 경협에 있어서는 통제가 있었지만, 이제는 정경분리 원칙에 의해서 남한의 기업들이 북한에 가서 활동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남한과 북한 간의 경협은 남북 간 화해에 도움이 되고, 양측 경제에도 도움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은 장사를 같이 하면 싸우지 않습니다. 남북이 서로 같이 머리를 맞대고 돈벌이를 하고 이해관계를 갖게 되면 눈에 보이지 않는 화해와 협력이 생길 수 있습니다.⁴³⁾

김대중은 청년시절 회사원으로, 관리인, 경영인으로 사업을 했던 경험을 살려 남북경제협력은 경제적 이익만 주는 것이 아님을 강조했다. 즉 경제협력이야말로 평화를 낳는 힘임을 입증해나갔다.

전쟁 없는 평화의 한반도 수립에 걸림돌로 되는 문제 중 하나가 주한미군 문제이다. 1971년 대통령후보 시절 ‘3단계 평화통일론’에서도 “한·미방위조약과 주한 미군의 계속 주둔에 의한 동맹 안보태세의 유지”를 안보정책의 기본방향으로 제시했다.

2000년 6·15남북정상회담에서 김대중은 김정일 위원장과 나누었던 주한미군 문제를 독일 언론 *Die Welt*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한반도가 통일되더라도 주한미군이 이 지역에서 힘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주둔해야 된다는 데 의견을 일치를 보았습니다. 소련의 붕괴 이후에도 유럽에 나토군이 주둔하고 있는 것처럼 주한미군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동북아시아의 미군은 유럽의 나토군보다도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는 김정일 위원장도 제 의견에 동의했었습니다.⁴⁴⁾

주한미군 문제에 대해서 김정일 위원장은 남한의 미군이 북한을 공격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확실하다면 현재는 물론 통일 후에도 미군이 한반도에 주

43) 연세대학교 김대중도서관 편, 『김대중 전집 I』 제1권, 226쪽.

44) 연세대학교 김대중도서관 편, 『김대중 전집 I』 제5권, (서울: 연세대학교 대학 출판문화원, 2015), 118쪽.

둔하는 것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습니다.⁴⁵⁾

두 번째 인용문은 연세대학교 김대중도서관이 개최한 6·15남북공동선언 5주년 기념 국제학술회의에서 김대중의 발표문 내용이다. 두 인용문의 내용을 연결해서 보면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평화를 위해서 주한미군이 필요함을 남북 모두 인정하되, 주한미군이 북한을 공격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우선시되어야 한다는 것이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주장이다. 다시 말해 주한미군이 대북 불가침 보장과 한반도 평화의 역할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한반도에 평화협정을 통한 평화체제 수립이 필수불가결하다고 할 수 있다.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 문제는 결국 현재 남북, 북미간의 교착상태를 가져오게 된 근본 원인과 직결되어 있다. 북한이 2000년대 핵무기를 갖게 된 결정적인 원인은 1990년대 구소련의 해체와 중국과의 관계 악화 등으로 핵우산이 없어진 상황에서 2001년 부시 정부의 강대국 미국과 직접 대결해야 했던 상황과 관련이 있다. 미국의 북한 적대시 정책과 맞물려 북한의 핵실험과 핵무장 문제가 현재와 같은 초강력 대북제재국면을 낳았다. 2000년 제1차 남북정상회담을 했던 상황에 비해 특히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미국의 대북제재 정책을 적극 지지했던 상황은 한반도 평화변영 시대를 열어가는 데 크나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금강산 관광의 중단과 개성공단의 철수 및 폐쇄와 같은 상황이나 북미간의 인권 및 북핵문제를 둘러싼 제재와 대결과 전쟁위기 상황이 10년째 지속되고 있다. 북한의 입장에서는 비핵화를 수용하는 대신 체제보장과 대북제재해지에 대한 요구를 할 수밖에 없고, 트럼프 미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에 복귀하여 완전한 IAEA사찰을 받아 내려는 상황이 2년째 계속되고 있다. 20년전 김대중

⁴⁵⁾ 김대중, 「한반도 평화의 새로운 진전을 위하여」, 류상영, 『6·15 남북공동선언 5년과 한반도 평화』 (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부, 2006), 43쪽.

정부가 했듯이 문재인 정부의 남북정상회담이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2018년 4·27판문점선언과 9·19평양남북공동선언·군사합의서에만 의지해서는 안 된다. 남북의 자율적 공간이 협소해질 대로 협소한 상황에서 현 국면을 타개하기 위해서 문재인 정부는 용기와 지혜, 결단이 절실하다.

2. 강고한 지역차별주의의 문화적 폭력을 동서화합·남북통합으로 치유하자

평화의 반대말은 전쟁이 아니라, 폭력이다. 전쟁은 폭력의 일종이다. 나라간, 민족간, 집단간 전쟁은 폭력의 한 형태이고, 가장 파괴적일뿐만 아니라 사람을 포함한 생명에게도 치명적인 폭력이다. 평화학의 대표학자인 요한 갈통(Johan Galtung)은 폭력을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모독하는 것”이라 정의하고 폭력을 직접적(물리적) 폭력과 구조적 폭력과 문화적 폭력으로 유형화했다. 직접적 폭력에는 전쟁이나 사형, 살인 등으로, 구조적 폭력에는 정치적 억압, 경제적 착취 사회적 차별 등으로, 문화적 폭력은 직접적 폭력이나 구조적 폭력을 정당화하는 문화 등으로 분류했다.⁴⁶⁾

거시적으로 보면 김대중은 독재와 분단의 직접적 폭력과 구조적 폭력, 문화적 폭력의 피해자였다. 그러나 김대중은 피해자에서 멈추지 않고 평화와 민주주의라는 무기로 폭력에 저항해온, 즉 폭력을 평화와 화해로 전환시킨 비폭력저항운동가이자 정치인으로 살아왔다. 30년 가까이 독재정권은 그를 세 차례 6년여 동안이나 투옥 시켰을 뿐만 아니라, 10여 년의 가택 연금을 통해 정치적 폭력을 가했다. 또한 내란음모사건처럼

46) 요한 갈통 저, 강종일 외 역, 『평화적 수단에 의한 평화』, 19~20쪽.

조작 수사와 고문은 말할 것도 없고, 납치 및 수장 협박, 망명, 외국 추방 등과 같은 직접적 폭력을 가했다. 그 외에도 김대중에 대한 감시, 도청 등의 일상적 폭력을 가했다. 그의 주변 지인들에 대한 괴롭힘과 사회적 배제시키기, 지역차별주의를 양산하여 호남인 차별하기, 언론 등에 의한 빨갱이, 용공·좌경, 과격주의 등의 낙인찍기 등과 같은 사회적 폭력이나 문화적 폭력을 전방위적으로 가했다. 수차례 죽음의 공포 속에서 형성되었을 지도 모르는 트라우마를 극복하여 평화주의자로 살아가려고 결심하고 노력한 김대중의 모습은 그것만으로도 대단하다고 말할 수 있다.

돌아보면 김대중은 85년 인생에서 몇 차례에 이르는 위대한 용서와 화해를 했다. 첫째, 자신을 가두고 고문하고 납치하여 수장시키려 했던 박정희를 용서하며 화해를 선언했다. 그 맥락에서 자신에게 내란음모죄를 조작하여 씌우고 사형선고를 하면서 군부집권의 정당성을 삼았던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을 사면⁴⁷⁾했다. 둘째, 역사적으로뿐만 아니라 분단의 원인제공을 하면서 독재정권을 옹호하여 자신을 투옥시키고, 사형을 선고한 남한 정권을 비호했던 미국과 일본 정부에 대해서도 비판을 할지 언정 적으로 삼지 않았으며 일본과도 역사적 화해를 하여 평화의 동아시아를 만들려고 했다.⁴⁸⁾ 셋째, 거시적으로 보면 북한은 한국전쟁을 도발한 주범이고, 개인적으로 보면 김대중은 한국전쟁 과정에서 인민군에 잡혀 죽을 뻔했던 위기⁴⁹⁾를 가져왔던 북한과도 화해하고 포용하며 전쟁 없

⁴⁷⁾ 김대중은 대통령 당선 직후 김영삼 전 대통령(이하 김영삼)과의 면담 과정에서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결정했다. 『연합뉴스』 1997년 12월 20일. 평화주의적 시각이나 정치적 관점에서 보면 전두환·노태우 사면은 의의가 있다. 그러나 사법적 또는 역사적 관점에서 보면 반인륜적 범죄에 대해 철저히 진상규명을 하지 않은 채 사면함으로써 불철저한 과거사 청산의 나쁜 선례를 남기게 되었다고도 볼 수 있다.

⁴⁸⁾ 연세대학교 김대중도서관 편, 『김대중 전집 I』 제1권, 103~104쪽.

⁴⁹⁾ 조한서, 『고난의 언덕에 핀 꽃 김대중』, 56~57쪽.

는 한반도 평화의 길을 열고자 했다. 이러한 화해의 정치적 행위 기저에는 정치적 현실주의뿐만 아니라 평화주의 사상이 있기에 가능했을 것이다.

그에게 가해진 문화적 폭력의 결과물 중 하나는 호남지역, 호남사람 차별과 편견이라는 지역차별주의와 연결되어 있다. 어느 나라나 시대마다 나름대로의 특정 지역에 대한 선입견과 지역감정, 지역차별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자신이 태어난 지역에 대한 애향심을 갖는 것은 어느 정도 자연스러울 수 있다. 그러나 한국 현대사에 1961년 이래로 1997년까지 나타난 영남 권력은 특히 호남지역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배제, 선입견의 문화를 생산 및 재생산했다. 결과적으로 김대중은 호남지역주의에 기대어 대통령에 당선될 수 있었던 점도 있으므로 정해구가 해석하듯이 오히려 지역주의의 수혜자라고도 할 수 있다.⁵⁰⁾

어쨌든 호남차별 30년은 독재 30년, 근대화 30년과 동시대적으로 진행되었다. 다시 말해 박정희에 의해 주도되어온 개발독재(developmental dictatorship)⁵¹⁾는 저임금·저곡가정책에 의지하여 진행되었는데, 저곡가정책의 주요 대상이 한국 곡창지대인 호남지역이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경인지역과 영남지역을 잇는 고속도로는 산업 성장의 상징이었으나, 호남은 경제성장에서 소외되어 있었다. 심지어 군대나 공무원의 인사에도 심각한 지역차별이 이루어졌다.⁵²⁾ 박정희 정권의 지역 편중적 경제개발이나 인사정책을 포함한 지역차별주의 정책이 1980년 5·18민중항쟁

50) 정해구, 「김대중·노무현 대통령의 지역주의 극복 정책」 『내일을 여는 역사』 37호 (2009), 60쪽. 정해구의 이러한 해석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이견도 있다. 김대중의 4번에 걸친 대권 도전 중 3번 패배의 주 원인은 선거과정에서 호남지역차별주의의 바람과 지역주의적 투표성향과 관련된다면 1997년 15대 대통령 당선의 주 원인으로는 DJP연합으로 일컬어지는 지역 연합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정태환, 「김대중 정권의 성립과 위기: 지역주의 정치 동학을 중심으로」 『사회와이론』 통권 제12집 (2008), 262쪽.

51) 이병천, 『개발독재와 박정희 시대』 (서울: 창비, 2003).

52) 김대중, 『대중경제론』, 67쪽.

을 불러일으키는 기본 배경⁵³⁾이 되었고, 항쟁 과정에 수많은 가짜 뉴스와 정보로 인해 영·호남간의 지역감정은 더욱 악화되었다. 김대중은 광주와 전남의 5·18민중항쟁을 1894년 동학혁명으로부터 1919년 3·1운동, 1960년 4월혁명으로 이어지는 민중·민족·민주의 정신을 계승하고 있는 것으로 보았지만 광주·전남지역의 희생⁵⁴⁾이 지대함을 강조했다.⁵⁵⁾ 1980년 5·18의 고통과 자신이 내란음모 조작 혐의로 사형언도까지 당했던 5·17내란음모 조작사건의 고통은 인동초 김대중에게도 트라우마가 되었던 것 같다. 1982년 5월 25일 이희호와 가족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잠시 보자.

존경하고 사랑하는 당신에게(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우리에게 가장 가슴 쓰라린 5월달도 이제 지나고 있습니다. 슬픔과 고독 그리고 한이 맺힌 지난 2년이었습니다. 두 해가 지난 지금도 그 당시를 회고할 심정이 되지 않습니다. 지난 2년은 가족과 벗들을 위해 그리고 우리 겨레를 위해 하루도 빠지 않는 기도의 나날이기도 했습니다. 면회시에도 말했듯이 주님과과의 대화 속에 얻은 위로와 격려가 없었던들 또 어떠한 고난과 좌절 속에서도 주님을 통하여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다는 믿음이 없었던들 오늘과 같은 도저히 유지해내지 못했을 것입니다.⁵⁶⁾

1981년 5월에도 착잡한 마음으로 가족에 대한 미안함을 표현했고 신

53) 한홍구, 「한국민주주의와 지역감정-남북분단과 동서분열」 『역사연구』 37호 (2019), 678쪽.

54) 安江良介(야스에 료스케)·김대중, 「한국 민주화의 길」, 97쪽.

55) 야스에 료스케와의 인터뷰에서 김대중은 광주·전남지역만의 희생을 주장하지는 않았다. 반유신·반독재·민주화 운동의 맥락에서 1979년 10월 16일의 ‘부산·마산사태’(현 부마민주항쟁)를 이해해야 하고, 1970년대 반독재민주화투쟁의 연속성에서 민중항쟁을 인식하고 있다. 安江良介(야스에 료스케)·김대중, 「한국 민주화의 길」, 99~100쪽.

56) 김대중, 『옥중서신 1』, 344쪽.

양으로 이겨나가리라고 다짐했다.⁵⁷⁾ 구속된 지 2년째가 되면서 좀더 고난과 좌절 속에서 희망을 찾아가고 있는 뉘앙스를 띠며, 감사와 용서의 마음을 키우면서 증오와 보복심을 극복하려 노력하는 마음을 적었다. 그 결과 중 하나가 위에서 지적했던 전두환·노태우에 대한 평화주의적 사면 행위로 나타나지 않았을까 싶다. 그리고 김대중은 15대 대통령 후보 공약에서나 국민의 정부 출범 후에도 거듭해서 지역주의 청산의 의지를 피력했다. 1998년 4월 30일, 대구 시민회관에서 열린 <제5회 대구·경북 지역 국가기도회>에 한 그의 연설문을 보자.

이제 우리는 분열과 갈등의 역사를 청산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당면한 국난을 극복하고 치열한 국제경쟁에 대처할 수 있는 국민화합의 시대를 우리 손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동서간의 화합이 중심축이 되어야 합니다. 동서의 화합이야말로 우리 사회의 분열과 갈등양상을 치유하고 극복하는 결정적인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가 망국적인 지역감정을 버리고, 서로의 권리와 능력을 존중하면서 함께 사는 열린 마음을 가질 때, 진정한 동서화합이 이루어진다고 믿고 있습니다. 저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국민의 정부 아래에서는 인재등용과 지역개발에 있어서 어떠한 차별도 있을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합니다.⁵⁸⁾

물론 그가 전두환을 사면했다고 해도 전두환은 진심 어린 사과는커녕, 잘못에 대한 시인조차도 하지 않고 있다.⁵⁹⁾ 또한 김대중이 아무리 '망국적인 지역감정'을 버리자고 호소하고, 인재등용과 지역개발에 차별이 없도록 한다고 선언을 해도 지역주의의 뿌리는 여전히 뽑히지 않은 채 남아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에도 대구 경북주민들은 새로운 정

57) 위의 책, 215~216쪽.

58) 연세대학교 김대중도서관 편, 『김대중 전집 I』 제1권, 208쪽.

59) 전두환, 『전두환 회고록 1』 (서울: 자작나무숲, 2017).

치의 가능성을 열어주지 않았고, 민주개혁진영도 지역 내의 새로운 가능성의 기반을 닦는데, 과감한 노력을 기울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⁶⁰⁾ 심지어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보았듯이, 특정 지역의 지역주의가 위기의식 속에서 결집되고 있는 양상마저 보인다. 그러나 이제는 지역차별주의 자체가 폭력이자, 반인권임을 각성하게 되었고, 과거처럼 지역차별주의가 사회적 차별과 배제 문제, 즉 사회적 폭력으로 공공연하게 작동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평화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역차별주의를 포함한 차별근절을 위한 제도화와 평화문화형성(peace building)의 노력이 동시에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3. 사회적 차별도 폭력이다

김대중은 한국 경제 문제나 여성 문제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져왔지만, 그러한 노동자 문제나 경제적 문제, 성불평등 문제 자체를 사회적 폭력 문제로까지 인식했다고 보기에는 관점에 따라 해석이 분분할 것 같다.

일반적으로 사회적 폭력으로서의 사회불평등은 전 시대적으로도 보편적인 문제 중 하나이자 자본주의 사회의 치명적인 문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불평등은 경쟁 자본주의를 넘어 신자유주의 체제하에서 개인의 빈곤을 넘어 빈익빈 부익부를 심화시키며, 가족이나 공동체의 해체를 확산시키고, 사회범죄나 사회해체를 가속화시키게 된다. 2015~2016년 ‘헬조선’, ‘금수저, 흙수저론’이 한국 사회에서 등장할 때 사회불평등 문제는 악화될 대로 악화되었다. 2016년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문제가 불거지고, 이화여자대학생들이 “총장 물러가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시위를

⁶⁰⁾ 한홍구, 「한국민주주의와 지역감정-남북분단과 동서분열」, 680쪽.

전개한 배경에도 사회불평등 문제가 깔려 있었다. 2016년 10월말 촛불시위가 점화되었을 때 거리로 나온 많은 사람들의 국정농단에 대한 분노의 저변에는 사회불평등 상황에 대한 분노와 절망감이 작동했다.⁶¹⁾ 1960년대 김대중은 국회의원 활동하면서도 사회불평등 문제를 깊이 있게 조망했다. 1968년 2월 7일 국회에서 반공을 제1국시로 삼던 박정희 정권을 향한 대정부 비판의 목소리를 들어보자.

무엇이 승공하는 길인가

(……)

또한 나는 이렇기 때문에 김일성이가 무력통일을 할 수 있다고 자신을 갖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남한에 있어서 이 농민의 말할 수 없는 빈곤과 소외, 이번엔 한꺼번에 탄광지대에서 수만 명의 노동자가 쫓겨난 것과 같은 그러한 가난한 우리 동포들에 대한 거의 방기 ·…… 보호권⁶²⁾ 외에 방기하는 상태, 부익부하고 빈익빈한 이런 경제의 격차 ·…… 명색이 민주주의를 한다면서 정보기관이 야당과 국민을 4중, 5중으로 감시하고 언론기관에 무시로 출입해서 신문의 제작에 간섭하고, 학생들 사이에 정보원들이 죽 깔려 학생을 가장해 가지고 학원의 자유가 여지 없니 파괴되고, 반정부 ·……. ⁶³⁾

당시 김대중 주장의 핵심은 반공을 주장하지만 말고, 노동자, 농민들을 잘 살게 하면 저절로 승공(勝共)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박정희 정권은 반공국가를 유지하기 위해 정보기관이나 경찰 등의 국가기관을 통해

61) 김귀옥 외 공저, 『촛불 이후 사회운동의 과제 및 전망』 (서울: 도서출판 선인, 2019).

62) 1962/1969년 개정헌법 30조 “①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②국가는 사회보장의 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에 따르면 사회보장, 국가의 보호개념이 등장한다. 그러나 1968년까지도 김대중 국회의원의 대정부 비판에서도 나왔듯이 당시 조항은 사실상 화중지병이었고, 당시 사회보장제도는 서구의 1930년대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었다. 『경향신문』 1968년 7월 17일.

63) 김대중, 『공화국연합제』, 77~78쪽.

국민과 언론을 감시 및 간섭, 탄압하고 있었다. 김대중의 관점에서 보면, 당시 한국의 사회불평등에는 경제적 불평을 탄압하려는 독재에 의한 정치적 문제와 사회적 문제도 얹혀 있었고, 물리적 폭력과 구조적 폭력이 혼재되어 있었다. 심지어 정부는 1960~80년대 개발독재 과정에서 노동자를 반정부세력으로 간주하여 민주적 노동조합을 불법시하고 노동운동을 탄압하고 저임금 구조를 유지하면서 수출위주의 대기업을 키웠다. 노동운동을 불법으로 규정하여 탄압하기 위해 농성하는 노동자들에 대해 경찰이나 구사대를 동원하여 무차별적 폭력을 가하고, 해고 노동자에 대해서는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직장을 구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 그러한 상황에서 김대중은 노동조합 간부에 대해서 중앙정보부가 가한 폭력과 투옥 문제를 비판했다.⁶⁴⁾ 노동자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노동자, 농민을 국민으로 인식하여 국민이 잘 사는 세상, 차별 없는 민주주의가 구현되어야 안보가 보장된다고 이해했다.

진정한 안보위기는 그러한 직접 납침의 가능성보다는 대한민국 내에서의 문제에 있다. 국민이 대한민국 내에서의 독재와 부패와 경제적·사회적 부정의에 분노하면서도 이를 해결할 길이 없다고 절망할 때 제2 월남·제2 필리핀의 위기가 배태된다. (……) 그러므로 진정한 안보를 위해서는 정치·경제·사회분야에 걸쳐서 민주적 자유와 정의가 실현되어야 하거나 또는 실현된다는 의심할 여지없는 희망을 주어야 한다. 이것만이 안보에 성공하는 유일의 길이다.⁶⁵⁾

김대중의 안보관은 총체적이고 구조적이다. 즉 강력한 안보가 군대에 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고 보며, 민주적으로 잘 훈련된 군대조직과 함께 백성이 잘 먹고 잘 살아야 실현이 된다고 하는 생각이었다.

⁶⁴⁾ 김대중, 『대중경제론』, 121~128쪽.

⁶⁵⁾ 위의 책, 220~221쪽.

또한 그는 노동자, 농민, 국민이 정의롭고 행복한 세상에 살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정책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특히 위생·보건 정책에 대해 깊은 관심을 기울여, 1998년 대통령 공약 이행에 따라 2000년 7월 1일부터 전국민 건강보험제도가 명실상부하게 작동하게 되었다. 그 전에는 227개 지역의료보험조합과 139개 직장의료보험조합 및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관리공단이 별도로 운영되어 지역과 직장 간 의료보험료 차이가 4배 정도 되었다. 그런 과정에 농민, 시민, 노동단체들의 보험료 거부운동을 비롯하여 투쟁도 많았다. 2000년 되어서야 이원화되어 있던 체계를 통합하여 전국민 건강보험제도가 탄생될 수 있었다.⁶⁶⁾

또 한편 김대중은 노동조합을 민주주의 제도의 필수조건으로 보았다. 한국의 개발독재 과정에 형성된 억압적 노동환경과 노동조합을 둘러싼 폭력적 생태계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오래된 다짐이 있었던 것 같다. 게다가 1997년 외환위기로 한국 경제가 총체적으로 흔들리면서 유례없이 단행되었던 정리해고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결의 의지를 표명했다.

김 차기대통령은 “정리해고가 말이 쉽지 당사자에게는 사형선고와 같고 가족들의 명줄을 끊는 것”이라며 “노동자 여러분은 나와 40년 동지다. 일생을 노동자를 위해 내가 대통령이 됐으니 나를 신뢰하고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협조해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⁶⁷⁾

김대중은 1997년 외환위기로 조성된 IMF차관경제 상황에서 집권했기 때문에 오랫동안 주창해왔던 “대중경제론”에 입각한 경제민주주의의 과제 이행을 우선시하지 않고, 경제위기 상황을 먼저 해결해야 했다. 그는 해결 방식으로서 자신이 오랫동안 꿈꿔온 협치민주주의 정신을 살린 ‘노

66)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건강보험통합 쟁취사』 (서울: 참여연대, 2010).

67) 연세대학교 김대중도서관 편, 『김대중 전집 I』 제1권, 23쪽.

사정위원회'(현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틀 속에서 찾아 나가고자 했다. 노사정위원회는 1997년 12월 24일 당선자 신분으로 제안되었고, 1998년 1월 15일 김대중 대통령 당선인이 참석한 가운데 출범하게 되었다. 그의 처음 구상은 노사정위원회가 출범하면서 노사정 간에 합의문을 도출하여 선행조치로서 정리해고는 인정하되, 탈법적 해고에 대해서는 금지하도록 하고, 기업 차원의 노사협력을 증진, 설날에 대비한 임금 체불을 예방하고, 구속 노동자를 석방, 사면, 복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다.⁶⁸⁾ 그러나 정리해고 문제는 노동계의 뜨거운 감자가 되어 노사정위원회는 출발부터 먹구름이 끼어 있었다. 그러한 IMF차관경제 상황이나 김종필 세력과의 타협으로 탄생시킨 정치 국면에 김대중은 평소 소신을 펴기란 근본적인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김대중의 성불평등 문제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자. 1971년 대통령후보 공약에서는 “인신보호법의 제정”⁶⁹⁾이 들어 있다. 일제 강점기 이래로 당시 - 사실은 최근 - 까지 여성이나 청소년, 노약자에 대한 인신매매는 심각한 사회 문제 중 하나이다. 여성인신매매의 사례는 비밀비재한데 1960년 후반에도 적용 법규마저 없었다.⁷⁰⁾ 납치, 사기, 사실상의 노예제로서의 인신매매 문제는 사회적 폭력이며 반인권적 심각한 문제이지만, 당시 여성단체들조차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 1959년 세워진 한국여성단체협의회 같은 단체도 1980년대에야 이 문제를 사회문제로 인식했던 것으로 보인다. 가정법률상담소에서도 인신매매문제를 가족 문제나 인권 문제로 주로는 1980년대에서야 관심을 보였다. 특히 이 문제에 관심을 가졌던 것은 진보적 여성단체라 할 수 있는 한국여성단체연합(약칭 여연)과 여성의 전화, 교회여성연합회 등이 주축이 되어 인신매매추방, 기생

68) 『연합뉴스』 1998년 1월 17일.

69) 김대중, 『공화국연합제』, 93쪽.

70) 『경향신문』 1967년 6월 20일.

관광반대, AIDS추방, 도색미국문화추방, 퇴폐영화광고 제거운동을 벌이면서이다.⁷¹⁾ 이런 여성운동사의 맥락에서 보면 인신매매의 주요 대상인 하층여성을 대변할 시민사회가 거의 부재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는 점을 볼 때 1971년 김대중의 이러한 정책적 공약은 나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그는 기타 사회정책으로 “여성의 능력개발과 지위향상을 위해 대통령 직속하에 여성지위향상위원회의 설치”⁷²⁾를 공약했다. ‘여성지위향상위원회’ 설치의 꿈은 1998년 제15대 김대중 대통령의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에야 대통령 공약 사항 이행으로 대통령직속 ‘여성특별위원회’로 실현되었다. 이후 2001년 1월 29일에는 여성부(현 여성가족부)가 탄생하게 되었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과 정리해고 선풍이 불던 당시 여성해고 ‘0순위’라는 말이 있었다. 이에 김대중은 “여성노동자가 우선 해고대상이 되고 있다는 성차별적 해고사례”에 대해서도 “노동부장관에게 그런 문제가 없게끔 정부가 철저히 조사하고 단속하도록 요청했으며 앞으로 이를 막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⁷³⁾고 했다. 그런데 이러한 사정은 1980년대 초중반에는 더욱 심각하여, “한국에서 여성들의 직장진출 기회가 극히 제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직장을 얻은 여성들은 직장 내에서의 차별대우를 받고 있다”는 지적을 하면서 성별 차별이 심각한 사회문제임을 지시해 “차별대우의 폐지”를 역설했다.⁷⁴⁾

국민의 정부 출범 과정에서 힘을 얻은 여성계에서는 한반도 평화의 문제에도 여성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라고 주장하게

71) 『한겨레신문』 1988년 12월 22일.

72) 김대중, 『공화국연합제』, 100쪽.

73) 연세대학교 김대중도서관 편, 『김대중 전집 I』 제1권, 23쪽.

74) 김대중, 『대중경제론』, 114~116쪽.

되었다.

여성들은 보다 구체적인 제안으로 1) 정상회담과 그 후속과정에서 민간단체의 민주적인 참여와 여성의 참여확대를 요구하고, 2) 여성의제를 함께 제기하면서, 이후 경제교류가 진행될 경우 여성에 대한 배려와 우대조치를 보장하고, 3) 모성파괴와 열악한 어린이 건강상태를 개선하기 위한 인도적인 지원을 실행하고, 4) 남북 모두 평화교육을 제도화할 것을 제기하였다(남북정상과 국민들에게 드리는 건의문)⁷⁵⁾

이러한 주장과 남북여성단체들의 연대 속에서 분단 이래로 처음으로 2002년 남북여성 통일대회가 성사되었고 여러 차례 여성단체들의 교류가 지속되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이래로 남북문제가 교착 및 대결 상태로 빠지게 되면서 남북여성의 대화와 교류도 답보상태에 놓여 있다. 현재 한국 사회에는 민주주의의 성숙 속에서도 여전히 성차별과 불평등을 포함한 가부장 문화가 내재되어 있다. 이런 상황에서 남북 화해협력과 평화의 시대를 연다고 하여 저절로 그러한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성차별 없는 성평등 문화를 만들기 위한 조건으로서 여성 국가기구를 만들어 둔 바탕 위에서 남한을 넘어 한반도와 동아시아에서 성평등한 사회와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여성들의 구체적인 노력이 절실하다.

4. 시민사회와 민주주의 그리고 평화

지구촌 국가들을 보면 대체로 민주주의가 발달할 사회일수록 시민사회가 활성화되어 있는 경향이다. 역사 이래로 인간 사회에는 사회불평등

⁷⁵⁾ 정현백, 「국가와 여성평화운동 - 김대중·노무현정부의 평화정치를 중심으로」 『여성과 역사』 제20집 (2014), 230쪽.

과 차별, 체제의 모순이 심한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건 저항운동이 생기
기 마련이다.⁷⁶⁾ 체제의 성격이 비민주적인 독재 정제에서는 시민사회가
합법적으로 존재하기 어렵기 때문에 국가권력과 저항하는 사람들이 직
접 대항을 하게 되어 투쟁이 더욱 격렬하고, 국가폭력의 강도도 강하고
진압방식도 더욱 폭력적인 경우가 허다하다. 그러다 보니 저항세력들도
정당방위를 위해 폭력 사용에 정당성을 부여하게 되니, 사회 전체적으로
는 도미노현상처럼 폭력이 넘치게 된다. 그러나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국
가권력의 문제에 대해 개인이 직접 나서서 문제를 제기하기보다는 시민
사회단체가 문제해결의 주체가 되는 것이 용이하다. 문제 제기 방법이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고, 방법 자체도 다양하다.

그러나 김대중이 정치사회로 뛰어들 때로부터 1980년대까지는 독재
정권이 강력한 힘을 휘두르면서 시민사회가 억눌려 있었다. 관제성 집회
를 제외한 학생이나 지식인, 시민, 노동자들의 집회 및 시위에는 의례껏
페퍼포그 차량이나 무장한 전투경찰이 등장했다. 특히 1970~1980년대 시
민사회가 취약했던 상황의 한국민주화운동에서는 대학생들의 역할이 커
질 수밖에 없었다.⁷⁷⁾ 그 이유 중 하나가 그러한 시민사회의 환경에서, 대
학생은 비교적 학교를 바탕으로 조직화되었고, 3·1운동 이래로 형성된
학생들의 희생정신이 일종의 선비정신이자 파토스(pathos)처럼 인식되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민주화운동과정에서 시민사회가 미약하게나마 존재하게 되는 데
에는 김대중의 영향이 적지 않았다. 1971년 제7대 대통령 선거과정에서
근소한 차이로 박정희가 승리하게 되자, 김대중을 회유, 굴복시키려 했
으나 그에 저항하자, 주지하듯 납치 후 수장시키려고까지 했다. 기사화

⁷⁶⁾ 조희연, 「운동과 저항, '오래된 현재」, 학술단체협의회 편, 『사회를 보는 새로
운 눈』 (서울: 도서출판 한울, 2008), 219~220쪽.

⁷⁷⁾ 위의 글, 232쪽.

생으로 그는 서울로 돌아왔으나, 귀국하자마자 가택연금과 구속을 당하게 되었다. 그후 그는 재야(在野)인사가 되었고, 본의 아니게 재야라는 대항 정치사회 또는 일종의 시민사회를 이끄는 지도자가 되었다. 1979년 김대중은 윤보선, 함석헌, 문익환 등과 함께 ‘민주주의와 민족통일을 위한 국민연합’을 결성하여 공동의장으로 반독재투쟁에 앞장서서, 비폭력 저항운동, 또는 시민불복종운동⁷⁸⁾을 몸소 실천했다. 또한 1984년 5월 18일에는 구여권 재야정치인들이 제5공화국 정권에 대항하고 민주화운동을 전개하기 위해 ‘민주화추진협의회’를 조직하여 공동의장으로 김영삼과 김대중⁷⁹⁾이 맡았다. 1985년 2월 김대중이 미국에서 귀국한 후에도 김대중은 사면 복권이 되지 않아 정치 활동이 금지되어 있었다. 그런 중에도 1986년 2월에는 민주협 대표의 한 사람으로서 대통령 직선제 회복하기 위해 제5공화국 헌법 개헌 청원 백만인 서명운동을 주도해나가면서 재야인사, 지식인, 학생들, 시민들과의 연대를 형성해 나가며, 1987년 6월항쟁을 승리로 이끄는 주역의 일원이 되었다.⁸⁰⁾

IV. 나가는 말

김대중을 평화주의자로 만든 것은 독재의 탄압과 정치적 실패, 그 속에서도 신앙생활과 이희호나 가족과의 사랑과 유대, 동지들과의 깊은 신뢰의 힘이였다. 물론 그의 심 없는 독서와 사유, 글쓰기의 과정이 그를

78) 박상필, 「시민참여와 시민운동」, 『NGO학』 (서울: 아르케, 2005), 271~309쪽.

79) 당시 김대중은 미국으로 추방되어 미국 체류 중인 상태여서 김상현이 공동의장 대행을 했다.

80) 조한서, 『고난의 언덕에 핀 꽃 김대중』, 228~229쪽.

객관적이고 논리적으로 사고하게 만들었다. 또한 독재정권과의 대결의 식과 탄압 속에서 정치적 노련함이나 현실주의 정치관도 단련되고 강화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를 평화주의자로 만든 것은 가족이나 동료들과의 신뢰의 관계와 자기 성찰을 하게끔 도와준 신앙의 힘, 역사와 민주주의에 대한 믿음이었던 것 같다. 그러한 힘이 있어서 수많은 죽음의 고비에서도 트라우마와 증오, 복수심을 극복할 수 있었다. 또한 역사에 대한 깊은 성찰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원동력이 폭력에서 나오기 보다는 비폭력이지만 끝까지 저항하는 정신, 즉 비폭력저항정신에서부터 나옴을 배울 수 있었고, 그는 간디나 톨스토이, 마틴 루터 킹목사를 공부하면 자신의 생각에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었던 것 같다. 그런 과정에서는 그는 평화주의자로 스스로 만들어진 것으로 추론된다.

그의 평화통일론은 조봉암의 평화통일노선(론)보다 확실히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내용들을 담고 있었다. 그러나 반공과 독재가 횡행했던 비이성의 시대에는 시기상조일 수밖에 없었으나, 한반도의 기본적인 분단 문제를 대통령선거 공약으로 만들어낼 만큼 통찰력과 추진력을 그는 보여줬다. 세계적 탈냉전 이후 한반도 통일과정이 좀 더 장기적이 될 수밖에 없음을 직시한 그는 급속한 통일단계보다는 점진적 화해협력교류 단계를 강조하면서, 통일에서 평화로 강조점을 바꾸었다.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과 남북공동선언을 통해 남과 북의 위기를 탈출하면서도 평화의 한반도 가능성을 극적으로 세계에 보여줄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 나간 김대중의 돌파력과 인동초 정신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그의 평화사상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지역차별주의를 혁파하고, 화합으로 만들어나가려 했다. 사회적 폭력으로서 계급적 차별, 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노사정 대화의 길을 열어 바꾸려 했고, 가부장제 문화에서 배태된 고질적인 성차별과 성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 최초로 여성부(현 여성가족부)를 만들어 제도적 수준에서 성평등의 길을 열어 두었다. 나

아가 힘이 없는 민중 또는 시민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시민사회, 사회단체가 받쳐주어야 비폭력저항운동을 실천할 수 있음으로 몸으로 보여주었다.

어떤 사람도 완벽할 수 없고,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그리고 공인으로서 김대중의 사상과 실천을 전체적으로 접근한다는 것은 애초에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이 글은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대결과 폭력이 아닌 평화의 수단과 대화로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조건과 제도를 만든 것만으로도 김대중의 국민의 정부는 새롭고, 김대중 자신의 평화주의적 사상을 최대한 현실화시키려 한 것은 사실이다. 많은 정치가들은 대체로 최고의 권력을 갖게 되면 받은 만큼 돌려주는 함무라비식 ‘응보적 정의(retributive justice)’를 실천해 왔다면 김대중은 평화의 관점에서 피해회복을 목표로 두는 ‘회복적 정의(restorative justice)’ 개념을 포함한 창조적 정의(creative justice)⁸¹⁾를 통해 새로운 정의·화해의 길도 제시했던 것도 사실이다. 이제 그가 남긴 평화사상과 실천을 더 높은 가치로서 발전시키느냐, 퇴행시키느냐는 당대인들과 후대인들의 몫일 것이다.

■ 접수: 2020년 10월 14일 / 심사: 2020년 11월 27일 / 게재확장: 2020년 12월 1일

81) 박명림, 「정의의 회복과 과거 극복의 완전성의 문제: 거창사건을 중심으로」 『일강법학』 제42호 (2019), 44쪽.

【참고문헌】

- 김귀옥 외 공저, 『촛불 이후 사회운동의 과제 및 전망』, 서울: 도서출판 선인, 2019.
- 김대중, 『대중경제론』, 서울: 청사, 1986.
- _____, 『공화국연합제』, 서울: 학민사, 1991.
- _____, 『옥중서신 1』, 서울: 시대의 창, 2009.
- 박흥규, 『함석헌과 간다: 평화를 향한 같고도 다른 길』, 서울: 들녘, 2015.
- 안경환, 『황용주: 그와 박정희의 시대』, 서울: 까치, 2013.
- 연세대학교 김대중도서관 편, 『김대중 전집 I』 제1권, 서울: 연세대학교 대학출판문화원, 2015.
- 연세대학교 김대중도서관 편, 『김대중 전집 I』 제2권, 서울: 연세대학교 대학출판문화원, 2015.
- 연세대학교 김대중도서관 편, 『김대중 전집 I』 제5권, 서울: 연세대학교 대학출판문화원, 2015.
- 요한 갈통 저, 강종일 외 역, 『평화적 수단에 의한 평화』, 서울: 들녘, 2000.
- 이병천, 『개발독재와 박정희 시대』, 서울: 창비, 2003.
- 이희호, 『이희호 자서전 동행』, 서울: 웅진지식하우스, 2008.
- 임동원, 『피스메이커』, 서울: 중앙북스, 2008.
- 전두환, 『전두환 회고록 1』, 서울: 자작나무숲, 2017.
- 정진백 엮음, 『김대중 대화록 1973~2008』, 광주: 도서출판 행동하는양심, 2018.
- 조한서, 『고난의 언덕에 핀 꽃 김대중』, 서울: 작은 씨앗, 2009.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건강보험통합 쟁취사』, 서울: 참여연대, 2010.
- 통일부, 『국민의 정부 5년간 대북정책 성과』, 서울: 통일부, 2002.
- 김광수, 「세계사의 흐름과 철학의 위치」 『현실과 철학』 겨울호, 1993.; 정진백 엮음, 『김대중 대화록 1973~2008』, 광주: 도서출판 행동하는양심, 2018(재수록), 351~431쪽.
- 김대중, 「문화란 운명인가?」 (기고문) *Foreign Affairs* 11~12월, 1994, 189~194쪽.
- _____, 「한반도 평화의 새로운 진전을 위하여」, 류상영, 『6·15 남북공동선언 5년과 한반도 평화』, 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부, 2006, 41~48쪽.

- 김학재, 「김대중의 통일·평화사상」 『통일과 평화』 제9집 2호, 2017, 59~90쪽.
- 로버트 스칼라피노·김대중, 「북한과 북한의 핵을 어떻게 볼 것인가」(1993), 정진백 엮음, 『김대중 대화록 1973~2008』, 광주: 도서출판 행동하는양심, 2018, 432~452쪽.
- 박명림, 「정의의 회복과 과거 극복의 완전성의 문제: 거창사건을 중심으로」 『일강 법학』 제42호, 2019, 39~70쪽.
- 박상필, 「시민참여와 시민운동」, 『NGO학』, 서울: 아르케, 2005, 427~496쪽.
- 박성희·김창숙, 「『통일』 수사학의 현실과 이상: 김대중 전 대통령 베를린 연설과 박근혜 대통령 드레스덴 연설의 수사학 상황 및 의미 분석」 『수사학 21』 제21집, 2014, 115~137쪽.
- 야스에 료스케·김대중, 「한국 민주화의 길」(『世界』 9월호, 1973), 정진백 엮음, 『김대중 대화록 1973~2008』, 광주: 도서출판 행동하는양심, 2018, 25~65쪽.
- _____, 「한국 현대사가 묻는 것」(『世界』 9월호, 1983), 정진백 엮음, 『김대중 대화록 1973~2008』, 광주: 도서출판 행동하는양심, 2018, 94~180쪽.
- 이현주, 「조봉암의 평화통일노선에 대한 검토(1946~1958)」 『한국근현대사연구』 제18호, 2001, 195~223쪽.
- 장현근, 「방벌(放伐)과 선양(禪讓)의 이중주 - 초기 유가사상의 정권에 대한 정당화」 『한국정치학회보』 제46권 1호, 2012, 5~24쪽.
- 정경환, 「김대중정부의 대북정책 평가와 향후 과제」 『통일전략』 제2권 2호, 2002, 79~103쪽.
- 정진아, 「조봉암의 평화통일론 재검토」 『통일인문학』 통권48호, 2009, 63~86쪽.
- 정태환, 「김대중 정권의 성립과 위기: 지역주의 정치 동학을 중심으로」 『사회와이론』 통권 제12집, 2008, 261~291쪽.
- 정해구, 「김대중·노무현 대통령의 지역주의 극복 정책」 『내일을 여는 역사』 37호, 2009, 60~79쪽.
- 정현백, 「국가와 여성평화운동 -김대중·노무현정부의 평화정치를 중심으로」 『여성과 역사』 제20집, 2014, 217~254쪽.
- 조희연, 「운동과 저항, '오래된 현재」, 학술단체협의회 편, 『사회를 보는 새로운 눈』, 서울: 도서출판 한울, 2008.
- 최용섭, 「김대중 정부의 대북 화해협력정책에 대한 평가」 『한국동북아논총』 제25호, 2002, 77~97쪽.
- 최정준, 「대북 포용정책이 국방정책에 미친 영향 분석: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을

중심으로」『사회과학연구』 제58집 2호, 2019, 299~331쪽.

한상진, 「내가 본 인간 김대중과 그 사상」, 김대중, 『21세기와 한민족』, 서울: 돌베개, 2004, 337~356쪽.

한홍구, 「한국민주주의와 지역감정-남북분단과 동서분열」 『역사연구』 제37호, 2019, 677~707쪽.

배인준, 「반MB가 오뉴월에 MB를 도왔다」 『동아일보』 2009년 7월 1일.

Kim Dae-jung's Peace Thoughts and Peaceful Practices

Kim, Gwi-Ok (Hansung University)

Abstract

Former president Kim Dae-jung was awarded the Nobel Peace Prize 20 years ago. It is a well-known fact that he was awarded for the arrangement of the first inter-Korean summit since their division and his long effort to create a war-free Korean Peninsula. However, whether Kim was a dangerous radical has been debated by some people. Thus, this article intends to examine whether Kim was a pacifist and practiced peace in reality.

The article begins with a brief introduction. The second section looks into the background of how Kim Dae-jung constructed the pacifist thoughts. The third section examines the peaceful unification theory, which was Kim's political trademark, particularly on the process in which the focus shifted from the unification to the peace theory. This section also introduces the problem of regional discrimination against Honam, which had haunted Kim through his political career, and explores how he overcame the violence of discrimination through peace. This will be followed by the analysis of his orientations and policies on the social structural violences, focusing on the issues of class and gender discriminations. The section ends with a brief examination of Kim's role as the leading actor of the peace movement in

the formation of civil society and is followed by the conclusion, which summarises the central argument.

Keywords: Kim Dae-jung, pacifism, the division of the Korean Peninsula, peaceful unification theory, regional discrimination, social structural violence, nonviolent resistance movement, democracy

김귀옥(Kim, Gwi-Ok)

김귀옥은 한성대학교 교양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고, 역사사회학, 분단사회학, 평화연구 등에 관심을 갖고 있고 구술사를 수행하여 한국현대사의 주요 문제를 접근해왔다. 주요 연구: 『그 곳에 한국군 '위안부'가 있었다』, 『한반도 세계시민성 담론연구』, "Building a Peaceful East Asian Community: Origins of a Regional Concept and Visions for a Global Age" 등 다수가 있다.